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태도 연구 -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이 상 열*·남 재 성**

<요 약>

재난안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대응역량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재난, 안전, 재난위험, 재난안전 관리, 지방자치단체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IV. 분석결과의 논의 및 정책제언
V. 결 론 |
|---|

I. 서 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복합재난에 노출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김영미, 2017: 62). 실제로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재난의 발생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등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채 진, 2012: 57).

그런데, 재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기 위해서는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 모두가 상호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 업무 수행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김영미, 2017: 62).

하지만,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의 상호 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편중되거나 집중되어서는 효과적인 재난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난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재난관리 정책 및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양방향 정보공유, 때로는 의견수렴을 통하여 재난관리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유병태·오금호, 2013a: 57).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들이 재난안전 관리의 일차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재난안전 관리 예산 등을 분석해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나는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에서 충당되고, 재난 발생 후의 복구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호동, 2011; 유은지·엄영호, 2017: 9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난안전 위험, 재난안전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기본 업무수행 및 단계별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역량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재난안전 관리의 의의

1) 재난안전 관리와 관리체계의 개념과 기능

일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는 재난의 통제보다는 총체적인 관리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돌발적 사건의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Karan & Wallace, 1984: 178; 남궁근, 1995: 959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따라 재난안전 관리체계란 “각종 재난을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체계”로 정의한다(이재은 외,

2005). 또한 재난관리체계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체계(Comfort, 1988: 344-349; May, 1985: 40-41, 김영미, 2017: 63 재인용)이며 재난발생이라는 환경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호 관련된 기관 간에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제이다. 때문에 재난안전 관리체계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으로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조석현, 2016: 3).

한편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기능은 자연재난·인적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연계되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파트너들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재난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체계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계가 대폭적으로 확장되지만 재난 복구가 완료된 후에는 구성원의 잠정적인 해체 또는 본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프로젝트 조직의 성격도 갖고 있다(안혁근, 2010: 117-130; 이훈래, 2015: 129 재인용).

2)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정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분류된다. 이러한 단계적 분류는 자연재난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같은 과정은 사회재난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방·대비 단계는 재난발생 이전, 대응·복구는 재난발생 이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 관리의 4단계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과정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과정의 활동내용 및 결과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복구활동과 결과는 예방단계에 환류되어 장기적인 재난안전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McLoughlin·Peter, 1985: 1025; 윤필환, 2017: 15 재인용).

2.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근거리행정의 주체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괄하여 주민에 대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행정의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김봉철, 2014: 324).

보다 구체적으로 재난관리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는데(최용호, 2005:678-679),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하며, 재난 발생의 현장에서 가장 근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있어서 일선책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체계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이유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할 비용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난은 피해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법정 채무의 증가 등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고갈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셋째,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재난을 수습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므로 재난관리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 수 있다(박동균, 2007: 86).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양기근 외, 2006: 11). 그리고 재난발생시 마다 체계적인 대응과 장기적 사후복구로 재발방지에 힘쓰기 보다는 일회적인 복구지원이나 사고책임자 처벌정도로 위기를 모면하는 미숙한 대응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최용호, 2005: 676) 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조직 현황

충청북도 11개 자치단체 재난담당부서 및 인원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난안전 관리조직은 안전정책과(청주시), 안전총괄과(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 안전관리과(영동군), 안전건설과(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단양군, 괴산군)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표 1> 충청북도 자치단체 재난담당부서 및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국명	과명	팀명 및 인원
청주시	안전도시 주택국	안전정책과	- 29명 - 안전정책팀 7, 시설안전팀 4, 재난관리팀 5, 민방위팀 4, 자연재난팀 5, 화학안전팀 3, 수해복구TF팀 2
충주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21명 - 안전정책팀 6, 안전점검팀 7, 자연재난팀 4, 민방위팀 4
제천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17명 - 안전총괄팀 10, 재난관리팀 3, 민방위팀 5, 예방복구팀 4
증평군	-	안전건설과	- 29명 - 건설행정팀 6, 안전총괄팀 5, 토목팀 6, 농촌개발팀 5, 하천방재팀 6
음성군	행정복지국	안전총괄과	- 21명 - 안전총괄팀 7, 민방위팀 4, 하천방재팀 6, 재난예방팀 4
진천군	-	안전건설과	- 29명 - 안전정책팀 8, 건설행정팀 7, 도로팀 6, 민방위팀 3, 복구지원팀 5
옥천군	-	안전총괄과	- 27명 - 안전관리팀 7, 재해예방팀 7, 통신관계팀 5, 내수면팀 8
영동군	-	안전관리과	- 23명 - 안전총괄팀 9, 재해복구팀 4, 재난예방팀 4, 민방위팀 3, 방송통신팀 3
보은군	-	안전건설과	- 26명 - 안전총괄팀 7, 건설행정팀 6, 도로시설팀 3, 재난안전팀 2, 하천시설팀 3, 소규모사업팀 5
단양군	-	안전건설과	- 26명 - 안전총괄팀 5, 도로팀 6, 안전관리팀 4, 예방복구팀 4, 하천팀 5
괴산군	-	안전건설과	- 25명 - 안전총괄팀 6, 토목팀 6, 방재복구팀 7, 민방위팀 3, 관리팀 5

※ 출처 : 각 기초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참조.

III.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인식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야 할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질문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개 문항을 비롯하여 재난안전 위협인식에 대한 6개 문항, 재난안전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기본 업무수행, 그리고 단계별 업무수행에 대한 총 20개 문항,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는 5개 문항, 정책방향에 대한 23개 문항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무작위표본추출(random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충청북도 지역주민 총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설문에 충실히 응답한 총 388명의 응답자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9.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의 방법을 통해 응답자들의 인식태도를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은 388명이며, 성별은 남자가 61.3%(238명)로 여자의 38.7%(15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와 50대가 각각 27.3%(10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6.9%(18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9.5%(18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이 27.3%(10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기타가 32.5%(12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학생과 사무직이 26.8%(104명)를 차지하여 뒤를 잇고 있었다. 끝으로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이 33.5%(130명)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거주기간 1년 미만의 응답자가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충청북도 지역에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로 인해 인구 순유입의 꾸준한 증가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 응답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명	%
전체		388	100.0
성별	남자	238	61.3
	여자	150	38.7
연령	10대	32	8.3
	20대	106	27.3
	30대	62	16.0
	40대	68	17.5
	50대	106	27.3
	60대	14	3.6
학력	중학교 졸업	6	1.6
	고등학교 졸업	182	46.9
	대학교 졸업	178	45.9
	대학원 이상	22	5.7

구분		명	%
종교	기독교	80	20.6
	불교	94	24.2
	천주교	10	2.6
	무교	192	49.5
	기타	12	3.1
소득	100만원 미만	106	27.3
	100~200만원	54	13.9
	200~300만원	70	18.0
	300~400만원	60	15.5
	400~500만원	68	17.5
	500~600만원	22	5.7
	600만원 이상	8	2.1
직업	학생	104	26.8
	근로직 및 숙련직	22	5.7
	예술, 체육, 및 사회사업	12	3.1
	사무직	104	26.8
	전문직	20	5.2
	기타	126	32.5
거주 기간	1년 미만	130	33.5
	1~3년	34	8.8
	3~5년	22	5.7
	5~7년	26	6.7
	7~10년	44	11.3
	10~20년	62	16.0
	20년 이상	70	18.0

2)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은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재난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과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안전 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대처 방안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재난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자연재난은 평균 3.68(표준편차=1.29),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평균 3.61(표준편차=1.26)의 중간값 수

준으로 나타나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고 무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이 평균 4.18(표준편차=1.15),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평균 4.08(표준편차=1.14)로 나타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로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을 위한 대처방안의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은 평균 3.62(표준편차=1.24),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평균 3.64(표준편차=1.27)의 중간값 수준으로 나타나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정도가 크게 높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처방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재난안전 위협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발생 가능성	자연재난	388	3.68	1.29	1	7
	사회재난 & 안전사고	388	3.61	1.26	1	7
무사할 가능성	자연재난	388	4.18	1.15	2	7
	사회재난 & 안전사고	388	4.08	1.14	2	7
대처방안 인식정도	자연재난	388	3.62	1.24	1	7
	사회재난 & 안전사고	388	3.64	1.27	1	7

3) 재난안전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도

재난안전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각종 재난 중 어떠한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하여 평균 5.27(표준편차=1.00)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화재(평균 5.15, 표준편차=1.45), 수해(평균 4.95, 표준편차=1.52), 대설(평균 4.91, 표준편차=1.42), 그리고 지진(평균 4.51, 표준편차=1.58)의 순으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강력범죄가 평균 4.93(표준편차=1.50)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성폭력(평균 4.90, 표준편차=1.56), 신종 전염병(평균 4.70, 표준편차=1.48), 교통사고(평균 4.66, 표준편차=1.62), 신종 감염병 및 전염병(평균 4.59, 표준편차=1.55), 사이버 피해(평균 4.58, 표준편차=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난안전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도 평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연재난	수해	388	4.95	1.52	1	7
	지진	388	4.51	1.58	1	7
	화재	388	5.15	1.45	1	7
	미세먼지, 황사	388	5.27	1.63	1	7
	대설	388	4.91	1.42	1	7
사회재난, 안전사고	신종 전염병	388	4.70	1.48	1	7
	교통사고	388	4.66	1.62	1	7
	산업재해	388	4.31	1.57	1	7
	신종 감염병 및 전염병	388	4.59	1.55	1	7
	유해식품	388	4.46	1.57	1	7
	강력범죄	388	4.93	1.50	1	7
	성폭력	388	4.90	1.56	1	7
	사이버 피해	388	4.58	1.60	1	7
신기술 위험	388	4.14	1.60	1	7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수행

(1) 기본업무 수행

현재 충청북도 산하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재난안전 기본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의 응답이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약간 잘한다는 응답이 22%, 약간 미흡하다는 응답이 15.0%, 대체로 잘한다는 응답이 11.3%, 대체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4.1%, 그리고 매우 잘한다는와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이 각각 2%의 순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평균 4.22(표준편차=1.19)로 제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정도를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기본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구분	명	%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8	100.0	4.22	1.19
1. 매우 미흡하다	10	2.6		
2. 대체로 미흡하다	16	4.1		
3. 약간 미흡하다	58	15.0		
4. 보통	164	42.3		
5. 약간 잘한다	86	22.2		
6. 대체로 잘한다	44	11.3		
7. 매우 잘한다	10	2.6		

(2) 단계별 업무수행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의 재난안전 관리 단계별 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재난안전실태점검이 평균 4.24(표준편차=1.00)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미흡사항의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평균 4.15, 표준편차=0.85), 세부실행추진 및 긴급피해복구(평균 4.15, 표준편차=1.08),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상황 통제(평균 4.15, 표준편차=1.18), 교육, 훈련 및 세부 실행계획(평균 4.11, 표준편차=1.19), 장기적 복구(평균 4.10, 표준편차=1.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단계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재난안전실태점검	388	4.24	1.00	1	7
미흡사항의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388	4.15	0.85	1	7
위험요소 점검, 전달	388	4.05	1.21	1	7
교육, 훈련 및 세부 실행계획	388	4.11	1.19	1	7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상황통제	388	4.15	1.18	1	7
세부실행추진 및 긴급피해복구	388	4.15	1.08	1	7
단기적 복구	388	4.07	1.09	1	7
장기적 복구	388	4.10	1.12	1	7

5) 재난안전 정책 역량

충청북도의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역량을 살펴보면, 재난안전 담당부서의 역량에 대한 응답이 평균 5.25(표준편차=1.19)로 가장 높게 제시되어 조직적 측면에서는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담당 직원 등의 전문성 역량 역시 평균 4.29(표준편차=1.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의 적절성(평균 3.81, 표준편차=1.12), 예산의 적절성(평균 3.78, 표준편차=1.08)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전담조직 및 관련 예산의 확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7> 재난안전 정책 역량에 대한 평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담당부서 역량	388	5.25	1.19	3	7
전문성 역량	388	4.29	1.16	1	7
규모의 적절성	388	3.81	1.12	1	6
예산의 적절성	388	3.78	1.08	1	6

6) 재난안전 정책방향

재난안전과 관련한 충청북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 및 체험에 있어서는 정규교육 강화가 평균 5.15(표준편차=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민대상 교육(평균 4.91, 표준편차=1.45), 그리고 주민대상 체험(평균 4.83, 표준편차=1.50)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가 평균 5.11(표준편차=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제정 및 매뉴얼, 제도 보완이 평균 4.89(표준편차=1.54)점,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평균 4.73(표준편차=1.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군민참여운동이 평균 5.23(표준편차=1.35)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재난안전네트워크설립(평균 4.88, 표준편차=1.41), 방지시스템 원 및 육성(평균 4.78, 표준편차=1.33), 그리고 군민참여형 제도 도입(평균 4.71, 표준편차=1.3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소방 및 치안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으로는 장비 및 치우개선(평균 5.41, 표준편차=1.32), 수시순찰 관리 및 감시(평균 5.01, 표준편차=1.37), 재난 대비 훈련(평균 5.00, 표준편차=1.42), 그리고 국제안전도시의 추진(평균 4.90, 표준편차=1.36)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한 행정적 부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소방도로의 확보가 평균 5.18(표준편차=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회복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평균

5.10, 표준편차=1.30), 유관기관 협력의 컨트롤타워(평균 5.06, 표준편차=1.45),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평균 5.06, 표준편차=1.50) 그리고 대피소 지원(평균 4.96, 표준편차=1.37)순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재난안전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확대가 평균 5.22(표준편차=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재난안전약자 지원(평균 5.04, 표준편차=1.36), 재난안전약자의 이동 및 대피수단 지원(평균 4.91, 표준편차=1.39), 그리고 재난안전약자의 보호인력 지원(평균 4.86, 표준편차=1.37)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재난안전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육 및 체험	주민대상 교육	388	4.91	1.45	1	7
	주민대상 체험	388	4.83	1.50	1	7
	정규교육 강화	388	5.15	1.47	2	7
정책	강력한 처벌	388	4.73	1.56	1	7
	법제정 및 매뉴얼, 제도 보완	388	4.89	1.54	1	7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388	5.11	1.46	1	7
주민 참여	방지 시스템 지원 및 육성	388	4.78	1.33	2	7
	주민참여형 제도 도입	388	4.71	1.34	1	7
	주민참여운동	388	5.23	1.35	2	7
	재난안전네트워크설립	388	4.88	1.41	1	7
소방 및 치안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388	5.01	1.37	1	7
	장비 및 처우개선	388	5.41	1.32	1	7
	재난 대비 훈련	388	5.00	1.42	1	7
	국제안전도시 추진	388	4.90	1.36	2	7
행정	회복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388	5.10	1.30	2	7
	유관기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388	5.06	1.45	1	7
	대피소 지원	388	4.96	1.37	1	7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388	5.06	1.50	1	7
	소방도로의 확보	388	5.18	1.44	1	7
사회 복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88	5.22	1.43	2	7
	재난안전약자 지원	388	5.04	1.36	2	7
	재난안전약자의 보호인력 지원	388	4.86	1.37	1	7
	재난안전약자의 이동 및 대피수단 지원	388	4.91	1.39	1	7

IV. 분석결과의 논의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의 논의

앞서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주민들의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식태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협의 인식에 있어 모든 영역에서 중간 수준의 인식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협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소규모 농촌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충청북도의 특성상 범죌나 안전사고 보다는 태풍에 따른 홍수나 장기간에 걸친 가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더욱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주민들은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영역 보다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사, 화재, 수해, 대설에 대한 중요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농촌지역이 많은 충청북도의 특성이 반영된 응답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수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기본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응체계가 비교적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재난안전 실태점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응체계의 총체적 점검을 통해 재난 위험요소들에 대한 사전적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에는 해당 내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단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자치단

체의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조직의 확대와 예산편성의 확대 등 재난안전을 위한 기본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교육 및 체험에 있어 정규교육 강화와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분야에서는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 참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를 가장 크게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 및 치안에 대한 인식에서는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소방도로의 확보, 회복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사회 복지적 지원에 있어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약자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높게 측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에서는 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 상시적 교육체계의 확립과 함께 주민참여형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소방과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예산확보와 지원확대,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총괄적 전담조직을 확대 신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1)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앞선 연구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재난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위 재난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여성, 어린이, 저소득층 가정,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재난안전 취약가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에서의 사회적 약자와 상당수 일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점검 이후에는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해오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주요 대상을 재난안전 약자 계층으로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해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행사’ 역시 소수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no=1223359>, 2018/12/02 검색). 더불어 소방 관련 안전장비 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예방 장비 지급, 여성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호신장구 지급,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장비 지급 등의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안전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매칭을 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난안전 자원봉사자를 모집, 등록, 훈련, 파견할 수 있는 소규모의 센터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등에 대한 재난발생시 조력자를 매칭(matching)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시민단체, 군, 경찰, 민방위, 및 의료 인력과 연계, 확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재난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예방 단계에서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대비단계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위협요소의 점검 및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대응단계에서는 더욱 지역수준에 맞는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상황 통제, 그리고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학기당 1회 정도의 안전체험관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더불어 찾아가는 학생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방과 후 교육과정에 재난 대비 체험 교육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재난 관련 교육 참가를 독려하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충청북도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인구 구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기존에 설치된 재난 안전 시설물

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안전 확보를 위한 고연령층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의사소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컨대 대피소 위치 안내를 위한 표시판, 문자, 접자, 음성 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노인층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물품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하여 호평을 받은 어린이 교통안전 ‘속도제한 가방커버’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해야 한다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17673&gubun>, 2018/1 2/01 검색).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 청정기 제공, 우리 집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등 다양한 안전 물품 보급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행정에 대한 만족도 증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민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재난의 방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지역주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안전확보를 위한 논의가 국가나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협의체에 일반 주민을 다수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과 같은 주민 주도형, 주민 참여형 제도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에서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캠페인과 의식 고취 운동을 실시하고 주민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재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과 경찰의 역할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하여 소방 및 경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경찰, 소방과 연계

한 합동 모의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합동 재난 안전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재난안전 활동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충청북도 주민들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소방 및 치안(경찰)에 대한 장비와 처우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확보와 지원확대,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확대, 재난 대비 훈련 확대 등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상위 충청북도나 각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일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찰이나 소방 기관의 증설과 더불어 제반 인력이 증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그동안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안전 불감증과 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재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의 억제라는 측면을 넘어 국민들의 신체나 생명의 보호는 물론 나아가 삶의 질과 복지수준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고경훈·이병기, 2015; 박동균·장철영, 2018). 따라서 재난에 대한 확고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난 및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여 전담조직의 미설치, 관련 예산의 부족, 주민 협력체계의 미구축,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구체적 지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과 재난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난안전 위협, 재난안전 관리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기본 업무수행 및 단계별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역량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협 인식이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

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최일선의 행정단위이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추적인 행정기관 역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주민 친화적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경훈, 이병기 (2015).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369-391.
- 김봉철 (20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그 강화방안.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4-327.
- 김영미 (2017).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 재난안전 거버넌스: 서울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융복합연구, 15(1), 61-67.
- 남궁근 (1995).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보, 29(3), 957-979.
- 박동균 (2007). 시민보호를 위한 세계 재해구호 거버넌스와 재난관리 협력 체계. 충북대 국가 위기관리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84.
- 박동균, 장철영 (2018). 체천화재참사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 한국지방자치연구, 19(4), 133-156.
- 안혁근 (2010).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17-130.
- 양기근 외 (2006).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의 개선방안-통합형 재난관리 조직설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25.
- 유병태, 오금호 (2013a). 재난관리 공시체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역량강화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9(5), 58-63.
- 유병태, 오금호 (2013b).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자체 역량분석 프로그램 개발.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9(3), 267-268.
- 유은지, 엄영호 (2017). 지방정부간 재난관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4), 89-113.
- 윤필환 (2017).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 외 (2005).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재난관리시스템 발전전략: 국가핵심기반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5(3), 53-83.
- 이호동 (2011).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방안: 일본의 지방위기관리체계 사례분석과 시사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7(3), 25-48.
- 이훈래 (2015).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4), 129-130.

- 조석현 (2017). 재난관리의 민관협력체계에 대한 폐기학습 이론의 도입가능성 모색.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1), 43-62.
- 채 진 (2012). 다조직 재난관리 협력체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9(2), 57-59.
- 최용호 (2005). 지방정부의 사전대비 재난관리체제 효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76-679.
- Karwan, K. R., & Wallace, W. A. (1984). Can We Manage Natural Hazard? : Book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 177-181.
- McLoughlin·Peter F. M. (1985). Subbiah Kannappan: employment problems and the urban labor market in developing nations. *Journal of Economic Issues*, 19(4), 1022-1026.
- <http://m.knnews.co.kr/mView.php?idxn=1217673&gubun>, 2018.12.01 검색.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23359>, 2018.12.02 검색.

【Abstract】

Study on Recognition Attitudes of Residents on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of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Chungcheongbuk-do

Lee, Sang-Yeol·Nam, Jae-Sung

This study analyzed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perceived by local residents of Chungcheongbuk-do and then examined the policy directions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safety level of residents and build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ir recognition of risks of safety against disasters, recognition on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was higher than that of social disasters or safety accidents. Secondly, also in the aspect of the importance of category of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they recognized that of natural disasters far higher than others. Third, they showed satisfaction higher than average with basic job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with safety management, whereas they showed relatively less satisfaction with the aspects of check and publicity of risk factors, and short-term restoration system out of phased job performance. Fourth, in the aspect of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they rated positively capability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s and the professionalism, whereas they relatively underestimated the scale or budget of safety-related organizations. Fifth, the policy directions to be taken for safety against disasters by local governments included strengthening of regular education like experience-based training, expansion of education among local residents, more support for relevant facilities and resources, activation of residents-participating campaigns, improvement of apparatus and personnel treatment related with firefighting and security, frequent patrol and oversight, more exercises against disasters.

So,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in local governments and build a effective responding system may need to extend programs assisting vulnerable class

to safety against disasters, build a community-friendly safety management system, extend the cooperation system by participation of residents, enhance collaboration and support system with safety-related bodies like police, firefighters.

Keywords: Disaster, Safety, Disaster risk,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Local government